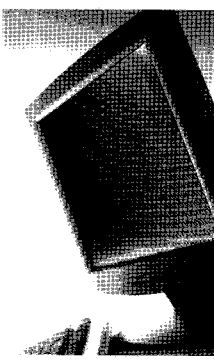




경영가이드 www.kcca.or.kr



- 중소기업 세제개편 방향
- 大·中企 상생협력의 성공조건
- 서민경제와 부동산가격
- 금리인상 충격 해소방안
- 독일 중소기업 정책의 교훈

중소기업 세제개편 방향

작년 연말 이후 경제성장률, 수출 등 거시경제지표는 상당히 좋아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지표경제는 살아났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제의 장기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대외 여건 또한 여전히 우호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더딘 고용회복,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회복의 둔화, 계속 진행 중인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곡물, 원유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 앙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물론 이와 같은 감세 기조는 지난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수용해, 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서민·친중소기업으로 급변 환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달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제개편안에도 친서민·친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대

폭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의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모름지기 풀뿌리 경제를 북돋우는 조치가 대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세 중심 조세부담 인상

조세통계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 점차 증가하던 내국세 대비 직접세 비율이 2007년 58.2%를 고점으로 2008년 0.9%p 떨어졌으며, 내국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2004년 이후 점차 하락하다가 2007년 30.9%를 저점으로 2008년 1.2%p 증가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돼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2007년 기준 21.0%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소이다.

또한 2008년과 지난 해, 2년 연속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에 0.5%p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돼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경우에도 담세 능력을 직접 반영하는 직접세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 인상과 같은 일반 국민의 소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세목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친서민, 출산장려, 고용창출 등의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인 정책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몰을 앞두고 있는 조세 감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전

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의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올해 신설되거나 연장되는 조세감면안도 이런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는 폐지를 앞두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주된 대안으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활용' 또는 '기능별 투자지원세제 활용(R&D, 에너지절약시설, 환경설비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세액을 상향 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고용지원 분야'를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투자촉진분야', 'R&D 및 인력개발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심을 기대한다. 부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산업의 허리'와 '풀뿌리 경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 힘든 중소기업의 큰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 1796호 2010년08월18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大·中企 상생협력의 성공조건

최근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이 이슈로 부상하고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는 어제 오를 일이 아니고,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슈로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정책이나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안이 붓물 터지듯 소개되곤 했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방안이 소개됐던가?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한 상생협력 선포, 주로 단기성으로 끝나곤 했던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프로그램 등 수 많은 상생협력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환경에서 올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대기업의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이는 등의 놀랄만한 결과를 보인 것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는 물론 롯데쇼핑을 비롯한 유통업체 또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의 놀랄만한 실적 발표를 접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을 둘러보면 여전히 어려운 서민경제에 씁쓰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심정이다.

대기업 자발적 동참 필수

대형유통업체들이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한 지금도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중소유통업체들과의 갈등, 대형유통업체들과 중소제조업체들 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비용 전가, 납품가격 인하 요구 등의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영역으로 대기업들의 진출이 공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대·중소기업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세와 나름의 노력을 볼 때, 과연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번도 소나기를 피해가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 지속가능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결코 캠페인이나 정책적인 압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해야

시장 논리에 근거해 대기업이 자본력을 이용해, 불법이 아니고 돈 되는 사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아직 한국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는 반응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 대기업의 지금까지의 거래행태나 사업 영역을 볼 때, 자본주의가 확립됐다고 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행태가 환영받을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굳이 여기서 답을 내리지는 않겠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권유도 하고 압박도 행사해 왔다. 이번 대통령의 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조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친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 온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과 오해를 받아 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왕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과거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다가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또한 이에 대해 대통령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100년 200년 존경받는 장수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스스로 동참해야 한다. 대기업이 홍보용 행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렇게 쉽지 않은 일하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것이 요즘 경쟁력의 키워드로 회자되는 차별적 경쟁력을 얻는 길이 아닐까 한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제 1795호 2010년08월04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서민경제와 부동산가격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일반 자영업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가 오래 동안 지속되고 있다.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적정하 기동율 아래에서 간신히 운영되고 있고, 휴점 및 폐업하는 자영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삶도 역시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일부 대기업들이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경제가 6%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대다수의 서민경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나?

대부분의 경제문제가 그러하듯이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의해 잘 나가는 대기업의 성장이 다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제구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즉,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과중한 가계 빚으로 인한 내수부족을 지목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계빚 증가로 서민경제 타격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판매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특수한 기술과 영업방식 그리고 좋은 입지로 인해 성장을 지속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들의 경우, 대다수는 내수에 의존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중한 가계 빚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700조원이 넘으며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43배에 달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고수준의 상태에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비율의 감소가 이루어진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인당 빚은 1,500여만원, 가구당 빚은 4,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가계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니 원리금상환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 소득수준이 중간계층 이하의 가계는 내핍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상승 경계해야

이러한 내핍생활의 결과, 우리 주변의 식당, 서점, 옷가게 등에서 매출감소가 일어나고, 이는 다시 이들 물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이들과 연결된 간판, 인테리어 등의 서비스업체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 빚의 60%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에 기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부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려 쓸 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발생한다.

즉, 우리나라 가계 빚의 상당부분은 개인들이 부동

산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개인들은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면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가계빚을 증가시키고, 이는 내수부족을 가져와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을 꾸준히 하향안정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당장은 부동산거래 및 건설 경기를 띄워 서민경제를 좋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마약과 같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가계 빚의 증가를 유발해 개인가처분소득의 감소 및 내수부족의 현상을 가져와 결국에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상승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 및 그 종사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1794호 2010년 07월 28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금리인상 충격 해소방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기준 금리는 2009년 2월부터 2.0%로 동결됐고, 7월 9일 역대 최장기간인 16개월 만에 기준금리도 2.25%로 인상됐다. 이는 한국 정부도 금융시장에서 출구전략을 시작한다는 본격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금리 부담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금융접근이 어려운 기업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은 금리 부담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 퇴출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7월 7일 발표한 금융기관의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3/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2/4분기와 같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확대 및 만기 연장 조처들이 종료(6월말)되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경우, 한계기업의 자금난과 함께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주택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남양건설 등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또는 부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신용위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금리인상으로 출구전략이 실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대출형태도 당연히 변화할 것이다.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은 상승했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은 증대 보다 축소, 기존 대출의 점진적 회수로 전개될 상황이다.

총액한도 대출 적극 활용

그러나 금리 인상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책금융의 도움으로 금융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들이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부지출 축소로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2010년 정부예산에서 이미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및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 해 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정책자금은 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증가하다가 2010년에 크게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8년 29조에서 2009년 38.9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 35.4조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기업의 보증 연장이나 신규보증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기술보증은 2008년 1.7조원에서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3.2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 2.08조원으로 감소했다. 기술로 평가를 받아 보증을 얻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도 어려워질 것이다.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토록

중진공 정책자금도 2008년 3.25조원에서 2009년 6.2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금융위기에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이 자금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중진공은 대리대출 보다 직접대출을 크게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기여했다. 2010년에 중진공 정책자금은 2009년의 약 1/2로 축소된 3.29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0년에는 신용보증, 기술보증, 중진공 정책자금 공급의 축소로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보증이나 정책금융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에게 보증 축소나 정책금융 축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변경할 경우, 총액한도 대출의 금리도 함께 조절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이 강화되도록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현행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력으로 금융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금리인상이 보류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활용하면, 금리 인상 부

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보증, 정책자금 등이 축소되고, 금리가 인상돼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자금부담의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금리 부담이 적은 중소기업 지원 금융을 적절히 찾고,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보자. 자금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기업에게 더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중욱 서울여대 교수
제 1793호 2010년 07월 21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독일 중소기업 정책의 교훈

최근 정부 및 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중소기업을 언급하면서 관심을 표명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기업위주로 성장전략을 펼쳐온 까닭에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담당했던 필자에게는 반가운 현상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많이 소외돼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의 대응책을 볼 때 중소기업은 아직도 정부 및 사회의 주요 인사들의 실질적인 관심의 밖에 있는 것 같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보면 대기업의 경기가 회복되니 우리 경기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시중의 유동성을 조이겠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정부의 발언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기능인력 양성시스템인 마이스터고등학교도 마

찬가지다. 우수기능인을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설립됐지만,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기업의 생산직에 취업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 역시 대기업지원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 中企 사회 · 경제의 중심

중소기업이 강하다는 독일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은 국가 요소창출 시스템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소화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시스템을 통해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우수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스템의 중심에 있게 된 배경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고 있는 독일의 사회경제체제가 있다.

독일어로 중소기업을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고 한다. 이 ‘미텔슈탄트’는 중간층, 중산층 등의 의미로서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사회적 측면의 의미도 포함된 용어라 할 수 있다. 즉 ‘미텔슈탄트’는 독일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독일을 구성하는 중추이며 국가의 중간층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 中企중심 정책과야

이는 단순히 중소기업을 규모로서 이해하거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의미와 크게 다르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언어 자체의 의미가 이미 사회·경제의 중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경쟁법은 독과점 및 카르텔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대기업과의 교섭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카르텔 형성을 허용하면서 중소기업을 존중하고 있다.

한 때 베스트셀러가 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르만 지문의 '히든챔피언'에 의하면 독일에 히든챔피언이 가장 많다. 독일에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이유에는 이렇게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는 독일의 사회·경제적 체제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반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말로만 중소기업을 위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로 중소기업을 국가경제의 중심에 두고 사회·경제적인 배려를 하면서 정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대로 중소기업을 등한 시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등한 시 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의 경제 및 정부의 정책 동향을 보면 아직은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는 실질적인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는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분야의 경제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이라 생각하다.

정남기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제 1792호 2010년07월14일 발행 중소기업뉴스